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청 년네트워크/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총선시민넷 안전걸공동운영위원장019-279-4251, 총선청년넷 김주호 간사010-4706-7097

제 목 최경환 의원의 취업청탁 관련 해명에 대한 총선넷의 반박 보도자료

날 짜 2016. 3. 07. (총 29쪽) 검찰수사 결과 한글파일-사진파일 별첨 자료 포함

## 보 도 자 료

**‘최경환 의원실 인턴 황00가 부당한 청탁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으로 채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덮을 수 없는 진실’**  
최경환 의원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검찰이 봐주기로 무혐의한 것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자들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돼... 경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어불성설

1.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2016 총선넷”)는 지난 3월 3일 최경환 의원 등 총 9인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하고(1차) 각 당에 낙천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턴에 대한 취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최경환 의원의 입장은 검찰 수사 결과(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 별첨)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취업청탁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와 적반하장 식의 행태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취업청탁으로 인해 황당하게 공

기업에 채용될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큰 상처를 입은 청년세대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20대 총선출마를 포기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며, 19대 국회의원이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의 민생과탄,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측이 나서서 의원실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킨 바가 있고(감사원 감사결과/검찰의 수사결과/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청년단체들로부터 올해 1/6일엔 직접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3/3일엔 경제민주화와 이들의 총선연대,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에서 최악의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3/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됐고, 2016 총선넷이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해서 평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2016 총선넷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4. 그러나, 지난 1/6일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발표에 따르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까지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을 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확인

---

1)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이것만 봐도 최경환 의원 측에서 명백하게 부당한 채용 청탁 및 부탁을 진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

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단 한차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으로 꼭 뽑혀야 할 다른 청년들을 탈락시키고,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이 기적처럼 채용됐음에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측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실세 정치인에 대한 ‘최악의 봐주기 수사’ 일 뿐이다.

5. 국정감사와 공기업 인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13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평가받는 의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청탁이, ‘채용 기준 내에서의 아주 단순한 부탁 수준이었다’ 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의원실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몰랐다’ 는 최경환 의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 의문이다.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전 부이사장, 실무를 총괄했다가 기소된 권00실장 등은 일관되게 ‘최경환 의원실의 연락마저도 당연히 최경환 의원의 뜻으로 해석했다’,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 황00를) 최종 불합격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보좌진에게 이야기하니, 보좌진이 이사장이 직접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사장이 당일 최경환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언론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명백히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기적보다 더 황당한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채용사건’ 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자세한 부연 설명 자료 별첨)

6. 또, 최경환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마치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려놓은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얻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

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살 만하고,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아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졌다’ 는 말에 어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가 정말 큰 위기라며 노동개약을 강요하고 밀어붙였었다. 얼마 전까지는 곧 경제가 망할 것처럼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해냈다는 식의 자화자찬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민생고, 실업과 일자리 불안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7.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채용 청탁 문제는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많은 진술과 증언,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이번 채용청탁 비리와 관련된 ‘몸통’ 을 밝혀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허위사실’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자숙하고,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국민들과 커다란 충격을 받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1. 이 사건 세부 설명 자료
- 별첨2.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부당 채용 사건 일지
- 별첨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심선언형 보도자료)
- 별첨4.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
- 별첨5. 최경환 의원 측 보도자료
- 별첨6. 1/6 청년단체 공동 보도자료
- 별첨7.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별첨8.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 ■ 별첨9. 1/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 ■ 별첨 1 : 이 사건 세부 설명 자료

- 최경환 의원실의 인턴 황00는 애초부터 서류면접 탈락자였지만, 외부의 청탁 또는 압력으로 거듭된 조작으로 후보로 올라갔지만, 결국 최종 면접에서 바로 탈락할 수준이어서(여기까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검찰의 수사결과로도 모두 확인된 사실), 당시 중진공 김범규 부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불합격 사실을 통지함. 그런데, 이를 들은 보좌진은 '이사장이 국회로 들어와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라' 말하여, 긴장한 이사장이 당일 바로 국회로 들어가 최경환 의원을 독대했다고 함(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임). 이 자리에서 박철규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내가 결혼시킨 아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결국 인턴 황00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황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처리 됨.
- 다만, 나중에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을 독대하러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왔다고 후퇴한 진술을 하긴 했으나, '부이사장이 나서서 직접 전화해서 결과를 알리는 정도면 충분히 응대했다' 생각했는데, 기관장이 들어와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라 하고 일정까지 잡은 것을 보니 그 정도로 최경환 의원이 챙기는 사람이라면 합격 안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 최경환 의원 말대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 어떻게 마지막 불합격 처리하려던 단계에서, 즉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보좌진들이 당시 최경환 의원과 박철규 이사장을 급히 독대케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임. 또 실제로 주요 관련자들이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중진공 관계자들이 일부러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어낼 하등의 이야기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박철규 이사장이 국회를 다녀와서 '최경환 의원이 결혼까지 시킨 아이라고 말하더라'며 반발하던 중진공 직원들에게 합격을 지시 했는데 그 구체적 표현은 당일 최경환 의원을 만나고 온 뒤에 비로소 처음 나온 것임. 역시 이런 말을 중진공 관계자들이 지어낼 어떠한 이유가 없고,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최경환 의원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역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 상황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바로 탈락할 황00에 대해 고의적이고 직접적이면서도 끈질긴 청탁 또는 압력이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관장인 이사장을 국회로 직접 들어오게 해, 최경환 의원을 독대케 한 사정만으로도(또는 독대를 주문한 것만으로도)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 ▣ 별첨 2 :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부당 채용 사건 일지

2013년 1월

- 최경환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2명 업무로 만난 뒤 보좌진 만나고 가라고 함.
-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황아무개씨 채용청탁(박철규 전 이사장, 인사총괄 부서장 권아무개 실장 검찰 진술)

2013년 6월~7월

-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실시(4500명 지원)
- 박철규 이사장, 인사 총괄 부서장에게 '최경환 부총리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 합격시켜라' 지시
- 인사팀, 서류전형 2299위 황씨 점수 조작해 통과시킴. 2차 면접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황씨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며 반대해 내부적으로 불합격 결정

2013년 8월 1일

- 김범규 부이사장,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보좌관에게 전화해 "황씨 합격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 보좌관은 '시간 잡아 줄테니, 이사장이 직접 원내대표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
- 박철규 이사장, 최 원내대표 만나고 온 위 '자기가 결혼시킨 아이라 뽑아주라고 했다'며 황씨 합격 지시 → 황씨 포함 36명 최종 합격

2014년 10월~12월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감사

2014년 11월 21일

박철규 전 이사장,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뒤 최 부총리 따로 만났음(검찰 진술)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청탁 인물에 '외부'라고 모호하게 표현

2015년 9월

국회 국감에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 부총리, 인턴 채용 압력' 의혹 제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최 부총리 전 운전기사도 취업시킨 사실 드러남

2015년 10월 8일

국회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범규 당시 공단 부이사장이 '최 부총리 개입' 처음으로 증언. 최 부총리 보도자료 내어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

2015년 10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압수수색

2015년 10월 22일

임채운 공단 이사장, 채용비리 당시 인사총괄 부서장인 권 실장 만나 “최경환 보호해라”  
회유(녹취록 발인)

2015년 11월11일

공단 ㅈ 간부 “검찰 들어가기 전에 부총리실과 다 조율하고 들어갔다”(녹취록 발인)

2015년 11월

박철규 공단 전 이사장과 인사담당자들 검찰 출석해 조사

2015년 12월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 전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양심선언형 보도자료 발표(최경환 부총리  
등 공단 외부의 최고위층 압력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최경환 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내용)

**▣ 별첨 3 :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  
심선언형 보도자료)**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먼저, 중진공의 채용담당 부서장으로서 근무했던 시기에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하여, 저  
역시 취업을 앞둔 두 자녀의 부모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과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름만으로도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청탁, 부당청탁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과 내부규정 부재, 공공기관  
의 전반적인 채용시스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물론 어떠한 책임감 조  
금도 느끼지 못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자들,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해야하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부패척결·약자보호·인권보호를 사명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 할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제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중진공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에 사업, 예산, 기관평가, 국정감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정부 고위관료들의 청탁을 그 어떤 기관이 쉽게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탁을 금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인사권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그 부당함을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러한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감사원은 공정치 못한 감사로 청탁자와 인사권자에 대해서 감추거나 모호한 조치를 내려 기관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진공 감사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조사 중에 그러한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11월17일부터 총 6회의 검찰조사 및 대질신문을 받으며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해 기관장과 함께 저를 사건의 피의자이자 “정점”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에 청탁한 권력자 및 기관장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압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많은 시간을 저의 혐의만을 몰아세우고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28년간의 직장생활을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온 저를, 거짓말을 일삼는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검찰의 태도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이번 사건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런 일이 어디 그 회사에만 있겠어? 그 사람만 그랬겠어? (청탁자의) 자기 자식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행사도 아닌데” 하면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위가 어찌되었건 간에)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6일간의 조사기간 내내 거듭 청탁자 및 인사권자에 대한 성역 없고 엄정한 수사를 강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검찰은 수사초기 미리 설정한 피의자로 한정하여 중진공의 내부비리로만 조사를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그런 틀로 진행되는 수사가, 저에게, 제가 관여한 것 이상의 책임을 덧씌우는 것도 몹시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염려되고 분노하는 것은, 이대로 사건의 진실과 본질이 흐려지고 덮어지는 상황입니다. 권력으로 공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망친 것도 모자라 그 책임마저 회피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들로, 부당청탁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 진실을 끝까지 모른 척 덮고자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눈감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진공의 채용비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고 죄스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적격자를 채용하라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고 인사총괄부서장 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

#### ▣ 별첨 4 :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2)

##### 2016. 1. 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결과 발표 참고자료

#### 1. 개요

-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상용)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입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 채용을 지시한 이사장, 운영지원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함

#### 2. 피고인

- A○○(58세,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B○○(53세,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 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건하지 아니함

#### 3.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고는, 인사실무자들로 하여금 지원자들 총 4명의 서류전형 점수

---

2) 검찰이 직접 설명하고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 부당한 청탁 또는 압력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중진공 내부자 2인만 기소하였음. 아주 문제가 많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채용 청탁과 부탁이 있었다는 표현이 아예 들어 있음.

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1차·2차 면접위원들과 공단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함

#### 4. 청탁 경로 및 부정 채용 내용)

채용 대상자	청탁 경로	부정 채용 내용
ㄱ○○ ( '12. 5. 7. 채용)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 ⇒ 중진공 이사장 A○○ ⇒ 중진공 인사팀장	최초 정보통신 분야 128등에서 지원분야와 평가점수를 변경하여 문화컨텐츠 분야 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ㄴ○○ ( '12. 12. 17. 채용)	불상의 국회의원 ⇒ 중진공 이사장 A○○ ⇒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B○○ ⇒ 중진공 인사팀장	최초 행정직 분야 4,771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하여 120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ㄷ○○ (12 ' . 12. 17. 채용)	중진공 출신 지인 ⇒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B○○ ⇒ 중진공 인사팀장	최초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11등으로 끼워 넣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ㄹ○○ ( '13. 8. 2. 채용)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비서관 ⇒ 중진공 간부 C○○ ⇒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B○○ (중진공 이사장 A○○에게 보고) ⇒ 중진공 인사팀장	최초 행정직 분야 2,140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하여 17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4)

#### ▣ 별첨 5 :최경환 의원 측 보도자료

제목 : 2016.3.3. 「2016 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총선넷 보도자료 주요내용>

□'2016 총선넷(2016.3.3.)'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부적격자로 황우여, 최경환, 김현중 등 9명  
을 선정, 발표함

3) 이중 네 번째가 최경환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기술 내용이며, 두 번째 나와 있는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의 압  
력과 청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내지 않고 있음.

4) 검찰의 수사결과만 봐도 명백하게 부당한 채용 청탁 및 외부의 부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나옴.

-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사유로
- ①현 정부의 민생파탄과 ②경제위기의 책임자, ③자신의 국회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킴 등 3가지로 밝힘

<최경환 국회의원의 입장>

- 저는 경제부총리 시절, 세월호 사건 이후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으로 한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침체된 자산시장과 주택시장을 개선하였고, 4대 구조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들로 구성된 우리의 성장전략이 G20 구조개혁 모범사례로 인정(G20 회원국 중 1등)을 받았으며,
-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얻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넷’에서 ‘현정부의 경제파탄과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저를 평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견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특히, ‘인턴 취업청탁 의혹’ 건은 그 동안 일부언론과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펼쳤으나, 검찰이 철저한 수사과정을 거쳐 2016년1월6일 ‘최경환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 ‘2016총선넷’은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해서 평가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2016 총선넷’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끝”)

**▣ 별첨 6 : 1/6일 청년단체 최경환 의원 등 고발 공동 보도자료**

1. 1/6일(수) 오늘 1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지난 2015년 10월 8일,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 부이사장과, 중진공 권00 경영지원실장(진술서 별첨) 등이 이번 중진공의 불법·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매우 부당하게도 최경환 부총리를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고용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 역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밝혀냈지만 누가 그러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실세 숨기기'식의 반쪽자리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4. 그래서, 그동안 청년실업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청년단체들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가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불법·부정 청탁과 압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벌인 일련의 은폐행위 문제까지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2013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진공 관련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관련된 결정적 진술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 담당자들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00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불법·부정 채용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6. 최경환 부총리 관련 황00씨가 무리하게 불법·부정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으로 또 다른 청년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관련하여 전국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채용 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 이로서 중진공의 신규 청년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7.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고용 부정·비리'사건 외에도 여러 정책과 언행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강탈해온 대표적인 '청년에게 절망을 주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취임한 시기동안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0대만 개인파산이 7.9%에서 10.6%까지 증가했습니다.(자료 2013~2015년 추이 결과. 최경환 부총리 취임 2014년 7월) 그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인상시키고,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정책을 펴 평안히 쉴 자리조차 없는 청년 민달팽이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약 정책들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오히려 청년·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임에도) 연일 거짓을 강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최경환 부총리의 운전기사도 중진공에 채용된 것이 확인돼 이 역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8. 이러한 정책과 행보로 청년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준 그가 다시 총선에 나간다가나 집권 여당 대표를 노린다는 등등의 소식에 청년들의 희망은 새해부터 꺼져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에 다시 나갈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고,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비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청년들의 희망이 자라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용 및 고용 과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이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채용 및 고용 정의, 사회정의를 존재한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꼭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9.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관련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당시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로 억울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서 떨어지게 된 청년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 최경환 부총리 범죄(인턴 채용 불법·비리) 의혹 관련 사건 일지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양심선언형 보도 자료)
-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 이 사건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2015. 7.) : 별도 첨부

## ▣ 별첨 7 :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고 발 장

- 고발인      1.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2. 청년광장 장재만 집행위원장
3.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4.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안전걸 공동사무처장
- 피고발인    최 경 환(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또는 업무방해 교사죄)등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취 지

####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발인 최경환은 제19대 국회의원<sup>5)</sup>으로 사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직에 있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부총리의 직에 있는 자이고,

고발인 위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채용정의와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단체들이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꾀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욱 더 많은 일자리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입니

5)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였음

다.

## 2. 범죄 사실

### 가. 청탁의 경위

(1) 피고발인 최경환은 하반기 채용이전인 2013. 1.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BI(Business Incubate) 문제를 상의하러 피고발인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중진공 간부 사무처장 전00 및 이사 김00이 회의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000 보좌관(비서관)이 할 말이 있는 듯하다, 듣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위 중진공 간부들이 만난 보좌진은 위 황00(최경환의 인턴 출신 인사) 채용을 청탁하였기에 이를 들은 위 간부들이 이러한 사실을 중진공의 이사장인 박철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중진공의 정규직 채용시기를 지난 시점이었던 관계로, 황00는 여타의 경로를 통하여 중진공 경산 연수원의 파견직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그 후, 2013. 6.경 중진공이 실시하는 2013년도 하반기 신입직원(36명) 공개 채용에 즈음하여 피고발인은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하여,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황00의 정규직 채용을 재차 청탁하였고, 이에 중진공측은 이사장의 지시를 통하여 인사담당자들을 통하여 황00의 합격을 위하여 관련 점수의 조작적 작출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를 통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및 현재까지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채용 전형이 진행되고 있던 2013. 6.경, 중진공 사무처장인 전00을 통하여 재차 청탁받은 이후, 인사총괄 담당자 권00이 위 공단 이사장인 박철규에게 “황00가 이번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하였는데 외부에서 관심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채용청탁을 받은 위 공단 이사장 박철규는 권00 실장에게 “그럼 한번 잘 봐줘라”라며 위 황00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경로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최경환 및 최경환 측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용의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바,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나. 선발 전형 과정의 위법

#### (1) 서류전형 및 인적성 심사과정의 위법행위

이와 같이 피고발인이 수차례 청탁을 한 이후, 박철규는 인사담당 총괄실장 권00 등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공단 신입직원 채용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전형 점수조작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고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위 공단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였습니다

박철규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 윤00 등은 위 황00의 서류전형 결과 합격대상 범위내에 들지 않자, 인사담당 팀장 박00에게 황00의 비계량점수를 긍정적으로 주겠다고 보고한 후 당초 2299위인 황00의 비계량평가 대상인 자기소개서(10점 만점)와 경력 등 요소 점수(5점 만점)를 각 8점 및 4점으로 부여하였고, 그럼에도 1200위에 그치자, 같은 해 6. 28. 황00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실시결과 및 인적성검사 계획(안) 보고” 문서를 기안하였고 그 결과 위 윤00은 같은 해 6. 28.경 박00 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사장인 박철규에게 결재를 올렸고 황00가 불합격된 것을 보고받은 박철규는 “황00에게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결제서류를 반려하면서 황00의 불합격처리를 재검토하여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윤00 과장은 황00의 자기소개서 점수 및 경력 등 요소 점수를 당초 8점, 4점에서 10점, 5점으로 각각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12점으로 평가하였던 학교 점수를 15점으로, 어학 점수를 당초 0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였는데도 황00가 176위로 불합격 대상자에 해당되자 황00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수를 174명(서류전형 각 8위, 50위, 63위인 3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후 176위인 황00 등 7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포함하여 최종 174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으로 늘려서 황00를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켰습니다.

## (2) 황00의 최종(2차)면접 탈락

위 (1)과 같은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황00는 제2차 면접에 이르러 외부면접위원이 포함된 면접과정에서 결국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2013. 8. 1.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박철규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 (3) 박철규의 피고발인에 대한 보고 과정

담당자의 보고를 받은 박철규는 ‘최경환 의원실에 관련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중진공의 부이사장인 김범규가 전화통화를 통하여 최경환의원실의 성명불상의 보좌진에게 전하게 되는데, 당해 보좌진은 ‘기관장인 박철규가 의원님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 하라’라고 하였던 바, 이에 박철규는 그 직후인 당일 오후 8시경 국회 원내대표실로 찾아가 피고발인 최경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철규는 황00의 불합격사실을 보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다’라고 하며 합격시킬 것을 재차 강요하였습



니다. 이후 종진공 본사로 돌아온 박철규는 권00에게 ‘최경환 의원이 결혼시킨 아이라고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황00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튿날인 8. 2. 황00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한 “신입(인턴)직원 채용 최종 면접전형 결과 및 임용계획(안) 보고” 문서가 작성되고, 채용 담당 팀장 박00의 중간 결제와 이사장 박철규의 최종결재를 받음으로써 황00는 같은 날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3. 법률적 검토

피고발인 최경환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황00가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규채용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국회의원 및 집권여당 원내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위 공단 관련자들을 통하여 위 공단 이사장 박철규에게 청탁하여 위 윤00 과장이 황00에 대한 서류전형 점수를 부당하게 변경케 하고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위 박철규의 지시를 통하여 권00 실장 및 윤00 과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발인 최경환의 채용청탁 행위로 말미암아 위 공단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법조로 평가되는 피고발인의 행위는,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질서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고발인은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 4. 결 어

가. 상술한 고발 사실은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2015. 7.)를 통하여 이미 모두 확인되었으며, 이후 다른 피의자-박철규, 권00-의 형사절차 과정 등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으로, 최경환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까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 위 감사결과에 따라 위 공단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현재도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나,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피고발인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상술한 바와 같은 피고발인의 취업청탁 행위는 공무원(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취업청탁에 의하여 합격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서도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피해자 개인들의 아픔으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선량하고 정직한 젊은이들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현상이 한국사회의 작동원리 그 자체라고 여길 지도 모릅니다.

라. 특히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발인 최경환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한국사회의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자임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에 앞서 취업에 있어 동등하고 정의로운 기회가 누구나에게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최경환은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취업청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선량하고 힘없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마. 만약 피고발인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청년들의 한국사회 이탈 흐름이 가속화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바. 위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이 그 행위에 상응하

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특히, 최경환 관련 황00씨가 무리하게 불법·부정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경환 외에도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으로 또 다른 청년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한, 최경환의 운전기사 출신 인사도 종진공에 채용된 것이 확인돼 이 역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외부 압력의 주체를 파악하고도 명시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 나아가 최경환의 불법·부정 청탁과 압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벌인 일련의 은폐행위 문제까지도 반드시 이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입 증 자 료

1. 감사결과 보고서(2015. 7.) : 별도 첨부
2. 이 사건 관련 일지
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
4.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실 및 주요 기사 모음
5. 이 사건 고발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보도자료 : 별도 첨부

2016. 01. 06.

위 공동고발인

1.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2. 청년광장 장재만 집행위원장
3.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4.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 별첨8 : 이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모음

### 1) 경향신문 12.16일자 사설

[사설] 중진공 채용비리 의혹 최경환을 소환조사하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간부들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철규 전 이사장은 최 부총리 보호막을 자처하고 임채운 현 이사장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최 부총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며 뭔가 주문을 했다. 중진공이 조직적으로 범죄은닉을 한다는 의심은 받을 만한 발언이다. 중진공은 '직원들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차원이지 강요나 회유는 아니었다' 고 해명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중진공이 2013년 하반기 36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서류전형 순위 2299위인 최 부총리의 의원 실 전직 인턴 황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은 정상적인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감사원은 중진공이 서류전형과 임원 면접에서 탈락한 황씨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외압' 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감사결과 발표에서 최 부총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그의 외압을 확인해준 것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범규 전 부이사장이 '박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나고 온 후 2차 면접결과가 뒤집혔다' 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명쾌해졌다. 당시 박 이사장으로부터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그냥 합격시키라' 는 최 부총리의 말을 전해들었다는 직원만 2명이다. 중진공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최 부총리와의 면담을 시도하고 감사원 간부에게 청탁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쯤 되면 최 부총리는 도의적이든 사법적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로서는 당연히 최 부총리를 불러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누가 최 부총리 이름을 팔았건 직접 외압을 행사했건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박 전 이사장도 '청탁을 받았다' 는 사실만 부인할 뿐이지 부당한 인사 지시 과정에서 최 부총리를 면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중진공 직원들로부터 범죄 수준의 인사비리에 최 부총리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끝내 외압의 실체를 밝히지 않은 채 감사를 미봉한 경위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미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도 중진공이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최 부총리 측과 수시로 대책을 논의했음을 암시하는 문자나 텔레그램이 다수 발견됐다. 물론 최 부총리 측에서는 '중진공이나 감사원 누구와도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내역 조회만 해보면 금방 밝혀질 일이다. 검찰이 최 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와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권 발동을 미루는 한 의혹은 더 쌓일 것이다.

## 2) 국민일보 12월 16일자 사설

[사설] 최 부총리 채용비리 연루의혹 조사 미적대지 말라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13년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무실 인턴을 점수 조작에 의해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드러났다. 인턴은 서류전형에서 2299위에 불과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36명에 포함됐다. 인사 청탁 의혹이 일자 최 부총리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당시 인사총괄 부서장인 권모 실장에게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는 대화 녹취록이 14일 저녁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 이사장은 10월 22일 권 실장을 만나 “너도 책임은 다 (박철규 당시 이사장에게) 올려. 최 부총리가 살아야 너도 (살아)”라고 회유했다. 또 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전달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어 검찰 출석을 앞둔 권 실장에게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것만 얘기해”라고 압박했다. 감사원 보고서가 청탁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최 부총리 관련 내용을 진술하지 말라는 요구다. 그러고는 “최경환이는 실세야. 살아 있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최 부총리 측과 긴밀히 협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 파문이 일자 임 이사장은 “직원 위로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 부총리가 결백하다면 ‘최경환’이란 이름을 들먹일 이유조차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최 부총리 측의 개입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범규 당시 중진공 부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그간 중진공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정작 최 부총리 측 수사는 미적대 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검찰이 적극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녹취록 내용만 해도 당사자들의 전화통화 내역과 동선 등을 추적하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 게다. ‘김수남 검찰’이 새로 출범했음에도 또다시 권력 실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3) 세계일보 12월 16일자 사설

[사설] 최 부총리 이름 판 중진공 이사장 믿는 구석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중진공의 은폐·회유가 있었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인사 책임자 권모씨를 만나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것만 (검찰에서) 얘기하라”고

말한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진공의 황모씨 특혜 채용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권씨는 징계처분(정직)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최 부총리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씨의 부당 채용을 지적하며 청탁 인물을 ‘외부’ 라고만 적시했다. 하지만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이 10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용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최 의원실을 다녀온 뒤 불합격 처리키로 했던 황씨를 합격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임 이사장이 권씨를 만난 건 검찰이 10월20일 중진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직후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 이사장은 권씨에게 “부총리나 기재부가 너한테 연락할 수 없다.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 권OO는 무혐의라고 했으니 권OO도 (최 부총리를) 지켜줘야 한다”, “최 부총리를 보호해야 한다. 최(부총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준다” 고 했다. 마치 최 부총리 측과 수사 관련 내용을 사전 조율한 듯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 측은 “임 이사장과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 고 부인했다. 임 이사장이 실제 최 부총리 측과 조율을 시도했는지, 권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최 부총리를 팔았는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특혜 채용을 저지르고도 ‘꼬리 자르기’ 에 급급한 중진공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문제의 발언은 사법당국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핵심 수사 대상자를 회유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정권 실세’ 의 힘만 있으면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검찰이 감사원이 적시한 ‘외부’ 실체가 누구인지, 최 부총리 측 개입 의혹의 진상을 얼마나 밝힐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임 이사장 발언이 공개된 이상 최 부총리 측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수사 결과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청년취업난으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한창인 요즘, 부당 채용 관행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단죄해야 한다.

#### 4) [단독] “최경환이 자기가 결혼시킨 인턴이니까 뽑아주라 했다더라”

한겨레신문 2015-10-09일자 기사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 인터뷰

최경환 인턴 왜 합격시키는지 인사담당자에 물었더니

“최, 대통령직인수위 있을 때 우리 쪽에 도움 줬다더라”

7월31일 최종 면접 본 뒤 내가 최경환 보좌관에 전화

“도저히 안되겠다” 는 말에 “이사장이 직접 와 보고해라”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특혜 채용’ 외압 사실을 폭로한 김범규(사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고 말했다.

-중진공이 최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를 채용하게 된 당시 상황을 좀 들려달라.

“처음에 입사 지원하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자료를 맡겨 접수를 산정한다. 부서장급 면접을 위해 10배수로 압축한 뒤 임원 면접 앞두고 3배수로 압축한다. 부서장 면접할 때쯤인가 인사담당 부서가 ‘우리가 도와줄 친구가 하나 있다. 최경환 의원 인턴 출신인 친구로 지금 대구·경북연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에 응모했다’ 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고 물었더니 ‘최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기관간 업무 분장을 하면서 우리 쪽에 도움을 많이 줬다더라’ 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면접 가는 것까지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면접 보니까 영 아니더라. 아예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거다. 우리 회사는 면접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당시 리크루트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후 면접위원들이 채용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뿐 아니라 리크루트사 대표도 뽑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내부적으로는 안 뽑는 걸로 의견 조율하고 접었다.”

-이후 최 부총리와 접촉하게 된 과정을 말해달라.

“7월31일 면접하고 나서 최 부총리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 거 아니냐. 박철규 이사장이 누가 의견 좀 전달해달라고 그랬는데, 운영지원실장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튿날인 8월1일 최 부총리의 보좌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노력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외부 면접위원까지 있으니 혹시나 (안 되는 거 뽑은 게) 소문이 나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고 했다. 그 보좌관은 이야기를 듣더니 ‘이사장님이 의원님께 직접 보고했으면 좋겠다’ 고 그랬다. 당시엔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내가 전화한 게 1일 오전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랬는데 퇴근 무렵 그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 시간 된다고 전화가 왔다. 이사장이 그때 여의도 주변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나와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러 최 부총리를 만나러 갔다. 나는 그 때 퇴근했고 다음날인 2일 아침에 운영지원실장이 최 부총리가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니까 그냥 (취직)시켜줘라’ 고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박 이사장이 지원실장에게 뽑아주라고 지시내렸다고 하더라. 뭐, 그래서 나도 결재했다. 인사는 이사장 고유 권한이니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최 부총리와 박 이사장이 나눈 얘기를 이사장에게도 직접 들었나?

“아니다. 운영지원실장을 통해 전해들었다.”

-실세 부총리에 대해 반대 증언하는 게 쉽지 않은 결심 아닌가?

“아무리 실세 부총리라고 해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건 옹기 있는 행동 때문 아니겠나.

솔직히 감사원 감사 없었다면 저도 퇴직하고 그랬으니 잊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감사를 받을 때만 해도 회사 입장 감안해서 감사받았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부인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냐 생각했다. 검찰이 이 문제 수사한다고 하겠는데, 제대로 하면 몰라도 솔직히 제대로 할 의지 있겠냐.”

-오늘 여당 의원들이 과거 이력까지 파헤쳐서 공격도 하던데?

“이미 내가 증인 나간다고 할 때 과거 이력까지 다 파헤칠 것쯤은 예상했다. 그분들이야 실제 부총리와 같은 식구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 젊은이들이 좋은 사회에서 살게 하려면 어른들이 누군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다만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까 어떤 의원이 조직에 충질했다고 하던데, 이 회사는 내 첫 직장이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30년 다닌 회사다.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덮지 않고 공개하면 당분간은 누구도 함부로 (낙하산을 내리는 등) 건드리지 못하겠지. 솔직히 이런 일 있으면 담당 직원들 스트레스가 굉장하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조직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mailto:hongbyul@hani.co.kr)

5) [속보]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 만나고 와서 ‘특혜 채용’ 지시했다”  
한겨레신문 2015-10-8일 온라인 보도

김범규 당시 부이사장, 국정감사 나와 증언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가 부당하게 합격한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박철규 공단 이사장은 최 부총리를 만나고 온 뒤, 점수 조작을 해도 합격이 불가능했던 황씨를 무조건 최종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씨가 당시 면접에서 굉장히 답변을 못해 내부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 ‘노력했지만 어렵겠다’ 고 전달했다. 그런데 보좌관이 지금 최 의원이 회의 중이라 따로 시간을 잡아 줄 테니 이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고 밝혔다.

김 전 부이사장은 이어 “보좌관 통화 내용을 박철규 이사장에게 전달했고, 퇴근 무렵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실에 다녀왔다.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사장이 나갈 때는 안 되겠다는 말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인사총괄 실장에게 ‘그냥 합격시키라’ 고 지시했다” 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2013년 7월31일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최 부총리와 박철규 이사장이 만난 날은 8월1일쯤으로 기억 한다” 고 덧붙였다. 실제 2013년 7월31일 최종 면접이 있었고 8월2일 합격자가 발표



됐다.

김 전 부이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관련해 “인사팀장이 황씨는 도저히 입사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계속 채용시키라고 하는데, 누군지 아냐고 물어온 적이 있다”며 “최경환 의원실 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줄 입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중진공 인사라인이 모두 황씨가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고 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셈이다.

박철규 전 이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다리 골절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김 전 부이사장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약속받은 것이 있느냐” (홍지만 의원) “보통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다들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증인은 기를 쓰고 나온 것 같다” (김상훈 의원) 등 되레 증인을 공격하는데만 몰두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을 부른 것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함인데, (여당에서는) ‘최경환’이라는 이름만 거론되면 조직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최경환 부총리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이 좋은 3명이 탈락했다. 이것이 공평한 사회인가. 외부 청탁과 공문서 위조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최 부총리 수행비서(운전기사)도 용역회사 들어갔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비리가 있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mailto:dandy@hani.co.kr)

## 6) 경향신문 12월 14일자 기사

[단독]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이 살아야 너도 살아…그럼 알지?”

- 9월 채용의혹 불거진 직후 ‘검찰 진술 말라’ 회유·압박
- “부총리 측서 무혐의 처리 약속…기재부·청와대도 관심”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 인턴을 지낸 황모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임채운 현 중진공 이사장(58)이 2013년 황씨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ㄱ씨를 수차례 회유하며 최 부총리 측이 무마해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이사장은 ㄱ씨와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부총리실에서 처리를 도와줄 것” “최경환이 힘이 있으면 해결을 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지난 7월 감사원이 중진공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유일하게 실질적인 징계 처분(정직)을 받았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 ■ 감사원 보고서 내용만 진술케

임 이사장은 지난 10월22일 저녁 ㄱ씨를 직접 만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황씨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4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두 사람의 대화 녹취파일을 보면 임 이사장은 ㄱ씨에게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ㄱ〇〇을 살려야 한다. 내가 (부총리실에) 최종 통첩을 했다. ㄱ〇〇이는 무혐의다” 라고 말했다.

그는 ㄱ씨에게 “너도 지켜줘야 해. 아는 것만 얘기해.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거. 책임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에게) 다 올리고 최 부총리가 살아야 사는 거”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난 날은 검찰이 황씨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월20일 중진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직후였다. ㄱ씨는 황씨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로,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다.

임 이사장의 말은 ㄱ씨에게 최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7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는 황씨 채용 과정에 대한 최 부총리의 개입 여부에 대해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만 언급돼 있다.

#### ■ “너도 최경환 보호해야 한다”

임 이사장은 ㄱ씨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최 부총리 측에 요청했고, 최 부총리 측도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려면 ㄱ씨도 최 부총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부총리나 기재부가 너한테 연락할 수 없다.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 ‘ㄱ〇〇이는 무혐의다’ 했다. ‘내가 전달하겠다’ 했다” 면서 “그 대신에 ㄱ〇〇이도 지켜줘야 해” 라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이 힘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이고, 최경환이가 대미지 입으면 흔들리는 것. 그것만 알아라” 고 말했다.

임 이사장이 “내가 오늘은 나올 땐 특별한 이유가 있고 내가 양쪽에 다 얘기했어. 책임지라고” 라고 말하자 ㄱ씨는 “양쪽이라는 게?” 라고 물었다. 이에 임 이사장은 “(부)총리하고 기재부” 라며 “ㄱ〇〇이는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 최가 힘이 있어야 우리 지켜준다” 고 거듭 말했다.

임 이사장은 “최후통첩 했어. 최경환이는 너한테 전화 못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라며 “부총리랑 기재부는 내가 다 얘기했고. 내가 오늘 ㄱ〇〇이 만나러 올 때 내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당신을) 살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개런티 한다. ㄱ〇〇이도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임 이사장

은 “최경환이는 실세야. 살아 있어” 라는 말도 했다.

임 이사장도 이날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대화 중간에 “녹취 안 하지?” 라고 묻기도 했다.

#### ■ “BH도 관심을 갖고 있다”

임 이사장은 10월22일 전에도 ㄱ씨를 최소 두 차례 만나거나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이사장은 9월25일 ㄱ씨에게 “어려운 고비 잘 견뎌달라. 희생에 대해 모두 고맙게 생각한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임 이사장은 이날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총리실에서 처리를 도와줄 것이며, 국감 증인 출석 안 해도 무방하다. 약속한 명예회복 등은 꼭 이행하겠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은 국회가 황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9월21일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과 김범규 전 부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직후였다. 임 이사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ㄱ씨에게 국감에 출석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10월8일 김 전 부이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이사장은 국감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실을 다녀온 뒤 원래 불합격이던 황씨가 합격 처리됐다고 말했다. 1주일 뒤인 10월15일 임 이사장은 ㄱ씨와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임 이사장은 ㄱ씨에게 “기재부에서 협조할 것이고 BH(청와대)도 이 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범규가 무리수를 뒀다” 는 취지로 말했다.

임 이사장과 ㄱ씨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중진공 측과 전혀 만나 바가 없고, 임채운 이사장이란 이름도 처음 들었다” 면서 “왜 자꾸 부총리 이름을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임 이사장 측에도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mailto:pudmaker@kyunghyang.com)>

7) 2015년 9월 1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단독] 최경환 전 운전기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한겨레] 인턴 입사 점수 조작한 공단

용역직서 정규직 전환 ‘이례적’

채용청탁 의혹 커져...검, 수사 착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을 지낸 황아무개씨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최 부총

리의 운전기사 출신인 ㄱ씨도 황씨보다 앞서 공단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채용 청탁’ 의혹이 한층 커지고 있다. 검찰은 황씨 부당 채용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사 : 36명 뽑는 공공기관에 2299등으로 합격... ‘최경환 인턴’ 의 기적 ).

16일 <한겨레>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파악해보니, 최 부총리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17대 국회의원(2004~2008년 5월) 시절 운전기사(7급 비서)를 지낸 ㄱ씨가 200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됐으며,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황아무개씨가 일하고 있는 곳과 같다. 대구경북연수원은 최 부총리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있다.

ㄱ씨는 최 부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한 뒤인 2008년 8월께 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처음 채용됐다. 당시에는 연수원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ㄱ씨는 1년 뒤인 2009년 공단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낮음)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어 2010년 8월에는 정규직 사원이 됐다. ㄱ씨는 시설·청소·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노동자가 정규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은 거의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가 없었다. 공단 안에 용역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특히 ㄱ씨는 이쪽(시설관리 분야)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사례로 뒷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공단 안에서는 ㄱ씨가 채용되고 정규직이 된 것은 ‘최경환의 힘’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ㄱ씨가 4-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최 의원이 직접 결혼식에 왔다. 이전 연수원 원장들까지 최 의원 얼굴 보려고 결혼식에 찾아가 장사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ㄱ씨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17대 때 운전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고향인 경산에 내려왔다. 지역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 공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들어갔다. 뒷사람이 좋게 봤는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며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쪽도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원욱 의원은 “최 부총리와 함께 일했던 인턴에 이어 운전기사까지 석연찮은 채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 부총리의 취업 청탁 해결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10월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최 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이경미 기자 dandy@hani.co.kr

▣ 별첨9. 1/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 참고자료

### 1. 개요

-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상용)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입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 채용을 지시한 이사장, 운영지원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함

### 2. 피고인

- A○○(58세,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B○○(53세,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건하지 아니함

### 3.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고는, 인사실무자들로 하여금 지원자들 총 4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1차·2차 면접위원들과 공단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함

채용)	⇒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B○○ ⇒ 중진공 인사팀장	120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ㄷ○○ (‘12. 12. 17. 채용)	중진공 출신 지인 ⇒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B○○ ⇒ 중진공 인사팀장	최초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11등으로 끼워 넣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ㄹ○○ (‘13. 8. 2. 채용)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비서관 ⇒ 중진공 간부 C○○ ⇒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B○○ (중진공 이사장 A○○에게 보고) ⇒ 중진공 인사팀장	최초 행정직 분야 2,140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하여 17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 합격시킴

※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